

# "거대여당 코앞에...노동물표로 맞서자"

노동과 세계 | 승인 2008.04.08 00:28

## 한나라당, 총선통해 거대여당 출범에 자신감...보수독식은 국민고통 확산으로 이어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보수언론과 그 세력들은 정말 나쁘다.

경제가 위기라면서도 10대 대기업들 순익은 눈덩이처럼 불었고 거액 배당금이 사장이나 임원진 주머니에 쏟아져 들어갔다. 하지만 고용창출은 사라졌고 비정규직만 늘어난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 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법제도 개악에 나섰다. 공권력은 백골단(사복체포조) 부활을 언급하면서 보다 가혹한 국민탄압을 예고한다.

<b>'돈 벌 능력이 중요하지 도덕이 밥 먹여 주냐?'</b>

분단 반세기 동안 민족을 악용해 자국민 통제에 나섰던 자들이 연일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를 긴장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런 방식으로 민족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적대적 대립분위기를 형성하면 순진한 국민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결국 올바른 정치사회적 판단조차도 마비되고 자기네가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독한 탐욕때문에 비롯되는 일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사회도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이 천연 에너지를 개발하겠다고 옥수수를 가공하는 바람에 전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식량가격 상승 때문에 폭동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식량자급률은 OECD 가입 국가들 중 27위에 불과한데도, 식량도 안보인데 이명박 정권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쿠데타를 강행하려 한다. 연일 치솟는 물가폭등은 서민들 생계 자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조종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 평균재산 40억원 이상에 이르는 부자내각을 구성한 채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고 '서민'을 말한다. 부자내각에 중용된 각료들 대게가 땅투기, 부동산투기, 병역면제, 이중국적, 논문표절, 허위학력, 세금포탈 등으로 얼룩져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능력'만 좋으면 되지 '도덕'이 밥 먹여주냐고 궤변을 부린다.

그런데 이들이 '경제위기'법원칙 준수'등 해괴망측한 논리를 주장하며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경제살리기론'을 떠들며 안정적 국회운영을 위한 '한나라당 국회 과반수 이상'을 주창한다. 그러나 이면에는 국회 입법권을 독차지해 헌법을 개악하고 장기집권 체제를 만들어 그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밑그림만 선명하다.

<b>한나라당 집권하자 되레 국민고통만 더해...그런데 국회과반수 밀어달라고?</b>

한나라당이 집권하자 터진 물가폭등과 경제불안 가속화, 한반도 긴장고조, 사교육 확산과 교육비, 의료비 폭등, 공기업 민영화, 노동자 대량해고, 재벌기업 신문방송 진출 허용, 역사 정통성 파괴, 투기적 개발광풍 조장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반서민 정책들이 한 순간에 튀어나왔다.

말 그대로 1% 부자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장기집권에 나선다면 이 땅의 온 국민들은 '경제와 국익'이라는 이름아래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특권집단이 썩고 부패한 냄새를 감추기 위해 더 큰 폭력을 행사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들에게 되돌아오는 것 아닌가. 그런 일이 한 두 번인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시대는 삭막하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보수언론 등으로 이어지는 그들만의 배불리기는 그들을 비판하는 국민죽이기로 나타났다. 우리는 '왜'라고 물어야 하고 '왜'라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18대 총선만 봐도 한나라당은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자기약속을 스스로 관철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이들은 되레 유권자 표를 모으기 위해 돈뭉치를 살포하거나 상대방 후보에 대해 흑색선전에만 혈안이다.

더불어 패륜내각을 구성하고도 총선을 장악하려는 현 정권의 국회 과반수 독점이라는 무리수도 총선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또 다른 국가사회적 위기감만 조장될 뿐이다. 이들은 잃어버린 10년을 채우기 위해, 그들만의 특권을 수호하기 위해 더 많은 국민의 희생을 요구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아무리 총돌이 벌어지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당해도 구제 받을 수 있을까.

<b>노동자가 맞아 죽어도 모르쇠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b>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우월적 권력을 남용해 부자특권만 강화한다. 벌써부터 노동자 학생,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때려잡기에 나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선거유세에서도 확인했듯이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

실제로 임금을 못받은 건설일용노동자가 임금을 요구하다가 맞아 죽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비겁하게 모르쇠로 일관한다.

선거 국면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런 일 때문에 그들의 표가 떨어질까봐 겁을 내기 때문이 아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 참정권 자체를 박탈당한 게 현실이다. 이들 태반은 4월 9일 선거당일 투표도 할 수 없다. 사업주가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임금을 빼버리기 때문이다.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한 약자들에게 그들을 보호해줄만한 국가는 없는 셈이 아닌가.

노동귀족론을 내세워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때려잡으면서도, 건설일용노동자나 파견직, 사내하청이나 계약직 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 하나 보호해주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국민 참정권 하나조차 보호해주지 못하는데, 이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돈으로 능력을 정당화하고 투기를 건강한 경제라고 떠들며, 국민을 향해 도발을 일삼는 배부른 자본과 정권의 포악한 탐욕을 보면서도 이들에게 표를 던진다면 그 자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폭력이다. 돈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때려죽이는 과격한 자본과 정권에게 표를 던진다면 이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살인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남북분열, 취업난 가중, 식품비·교육비·의료비 상승, 대기업 확장·중소영세상공인 몰락, 비정규 노동자·장기실업자 양산 등을 주도하는 보수세력의 정치·경제 독식은 위기 그 자체다.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미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부자정권과 권력독식에 빠진 한나라당이 만들 미래는 두렵기만 하다.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현실 앞에서 노동자들은 무서운 속도로 분노하고 있으며 멈출 수 없는 투쟁을 다짐한다. 전사회적 절망과 불만은 분노로 바뀐 채 폭등하고 있다.

노동자가 이 난국을 '정면돌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가 꿈꾸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비단 노동자만의 것이 아닌, 썩고 부패한 특권귀족집단의 권력독차지를 막고 우리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다. 힘없는 민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방안 아닌가.

우리는 노동자라는 동지애와 연대의 양날개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보수언론이라는 썩고 부패한 몸통을 쓸어내야 한다. 우리는 갈림길에 놓여있고, 단박에 답을 찾아야 할 비상한 시기에 서있다. <b>"노동자단결, 노동자물표만이 살길"이라고 다시 외쳐야 하나.</b>

<채근식/민주노총 편집국장>